주호영 등 與 비대위원 총사퇴… '새 비대위' 출범 가시화

당헌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일부 의원 "개정안 꼼수" 반발
이르면 내일 위원장 인선 발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전 체제는 일괄 사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도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 유권 해석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로 붙였다. 상전위가 지난 2일 작성한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도 같은 날 전원 사퇴했다. 비대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린 결론이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7차 상전위에서는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오는 8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도 했다.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상전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사퇴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의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상황이다.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이 '법원 판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면서 반발했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국민 생명·안전 위해 최선… 비상대기"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
일치단결해야 가족·이웃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대한민국을 향해 북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색 민방위 옷을 입고 출근한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식 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며 "오늘 자정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재난관리와 구급·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先)조치·후(後)보고'"라며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필요한 대응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보고 해주길 바란다"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퇴근은 안 하고 상황을 챙길 것이냐'고 묻자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동 관저 입주와 관련한 질문에는 "글쎄, 뭐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이재명·김건희 수사' 두고 與野 충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가 5일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20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6일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했다는 설명과 달리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에 관여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를 두고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를 거론하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대표에게) 드린 것이고,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尹 정부,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

민주당, 긴급의총서 정치탄압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당대회부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초당적으로 민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제안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총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를 소환을 통보한 것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총 인사말에서 검찰 출석과 관련한 말은 줄이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 물가 급등과 추석 민생 대책, 태풍 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어떤 협력을 마다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구용

〈전남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추후에 인선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광주, 전남 출신으로 인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를 당 차원에서 챙기기 위해 구성한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박태홍 기자

정의당, 총사퇴 권고 부결 "무거운 책임감"

"많이 부족했다… 쇄신할 것"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들에 의해 치러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부결된 것에 대해 "정의당 비례대표단은 당원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의에 헌신해온 수많은 당원들과 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이번 총투표를 발의하신 당원들, 찬성과 반대에 투표하신 당원들, 그리고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들까지도 당의 혁신과 의원단의 쇄신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